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6. 23.(목) 09:30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 08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송헌규 (044-200-2082)
		담당자	경 정 이인배 (044-200-2085)

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·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!

- 부처별 분산된 전화 · 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·대응센터로 일원화

-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, 강력한 수사 전개 계획

□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(화) 정부서울청사에서 **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**를 개최했습니다.

* 참석 : 과기부, 법무부, 방통위, 금융위, 대검찰청, 경찰청, 금감원, 국정원, KISA 등

○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·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, **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,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**해졌습니다.

※ 붙임1 :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현황

○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,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**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**입니다.

- 특히, 최근 **고금리·고물가 등의 경제상황**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**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**한 상황입니다.

□ **첫째**,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**「보이스피싱 통합신고·대응센터」를 설립**할 예정입니다.

○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**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**하고 있어,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·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,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

※ 붙임2 : 현행 부처별 신고창구 운영 현황

○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·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, **전화번호 이용중지·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**하고 있었습니다.

※ 금융·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·변종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·통합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

□ 정부는 **「보이스피싱 통합신고·대응센터」**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(방통위·과기부·금융감독원·한국인터넷진흥원) 인력을 파견받아 **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'원스톱'으로 처리**하겠습니다.

○ '센터'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**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통합**하는 것을 시작으로,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**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·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**하겠습니다.

※ 붙임3 : 센터 설립 추진경과에 따른 단계별 운영방안

○ 아울러, 신고데이터 집적·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*는 동시에 처리하고, **신고데이터는 수사·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·대응체계를 구축**하겠습니다.

* 범죄 피해금 환급,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, 계좌 지급정지,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

□ **둘째**, 대검찰청·경찰청·관세청·국세청·금융감독원·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「**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」을 설치·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**하고,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·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.

○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**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,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**하고,

-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, **범죄단체 조직·가입, 피해금 해외반출, 대포통장·대포폰 유통**,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**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**하겠습니다.

○ **범죄수익 환수, 피해자 구제,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**하고,

- 중국,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**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**,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'신고에서 수사까지' 검·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**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·상담부터 수사, 송치,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**(패스트트랙)가 이루어지며,

○ **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**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**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, 대포통장·대포폰 유통조직, 자금세탁 조직** 등도 끝까지 **추적하여,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**으로 사용되는 것을 **반드시 차단**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**보이스피싱 범죄**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**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**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**민생을 최우선**으로 챙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

○ 향후 **‘보이스피싱 통합신고·대응센터’가 금년말까지 설립**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, **‘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’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**에 관하여 **관계부처들과 논의**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송헌규 (044-200-2082)
		담당자	경 정 이인배 (044-200-2085)
<공동>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 이응철 (02-2110-3269)
		담당자	검 사 문종배 (02-2110-3269)
<공동>	대검찰청 마약 · 조직범죄과	책임자	과 장 홍완희 (02-3480-2280)
		담당자	검찰연구관 이종민 (02-3480-2442)
<공동>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 김종민 (02-3150-2037)
		담당자	경 정 김혁진 (02-3150-343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현황**

○ (발생검거 현황) 지난해 대비 피해액 11% 증가

구 분	발생건수(건)	피해액(억원)
'19년	37,667	6,398
'20년	31,681	7,000
'21년	30,982	7,744

○ (피해자 연령) 40~50대가 52.7%로 '20년에 이어 대다수였음

구분	발생건수 (합계)	남	여	20대 ↓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 ↑
'20년	31,681	17,293	14,388	5,323	4,406	7,704	9,217	4,188	843
						53.4%			
'21년	30,982	17,027	13,955	5,459	3,299	6,755	9,564	4,778	1,127
						52.7%			

○ (건당 피해액) 1,000~3,000만원이 45.9%로, '20년에 비해 다소 증가

구분	발생건수 (합계)	100만원 미만	100~500만원	500~1,000만원	1,000~2,000만원	2,000~3,000만원	3,000~4,000만원	4,000~5,000만원	5,000만원~1억원	1억원 이상
'20년	29,567*	2,184	3,127	5,934	8,032	4,219	2,145	1,345	1,896	685
				47.2%						
'21년	30,982	2,351	2,399	4,404	8,907	5,313	2,764	1,699	2,364	781
					45.9%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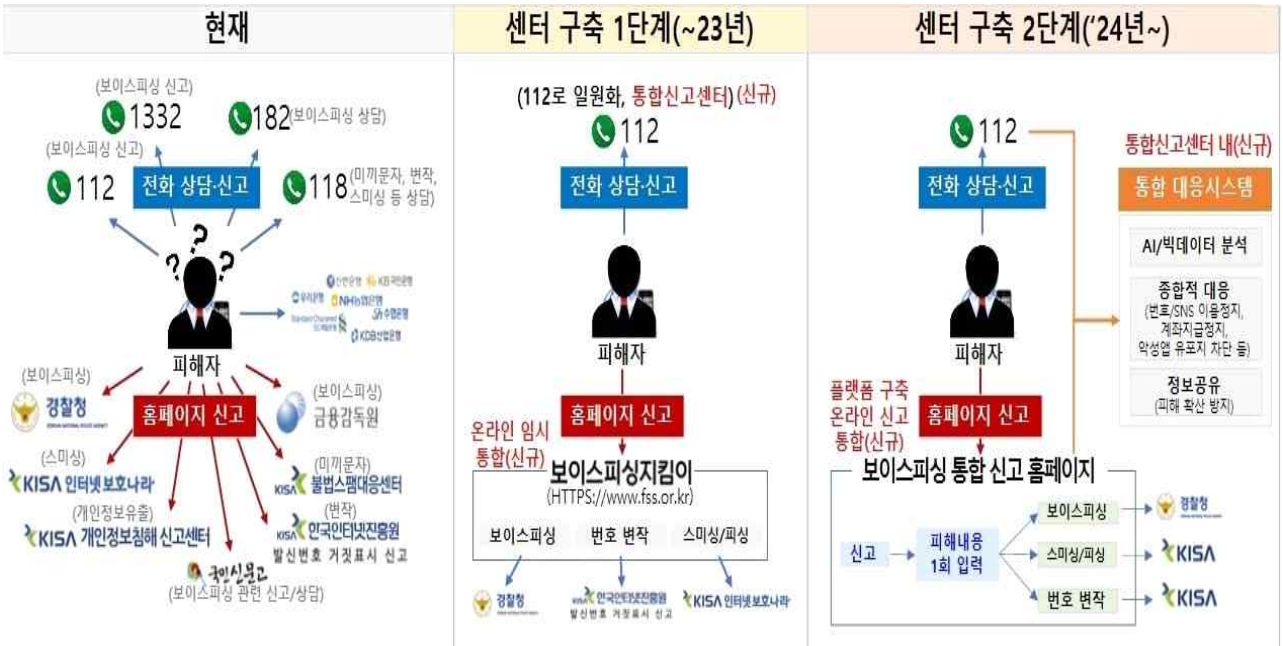
○ (사칭·수취 유형) 사칭유형은 '대출사기형'이 75.6%, 수취방법은 '대면편취형'이 73.4%로 다수 차지

구분	사칭 유형(건)		수취 유형(건)					
	대출 사기형	기관 사칭형	대면편취	계좌이체	상품권 등 현금 외 요구	배송형	절취형	기타
'20년	23,837	7,844	15,111	10,596	3,582	276	160	1,956
	75.2%		47.7%	33.4%	11.3%			
'21년	23,965	7,017	22,752	3,362	3,900	418	89	461
	75.6%		73.4%	10.9%	12.6%			

붙임2 현행 부처별 신고창구 대응 현황



붙임3 단계별 운영방안



현재	센터 구축 1단계(~23년)	센터 구축 2단계('24년~)
➢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따라 직접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 ➢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등 대응이 늦을 수 있으며 국민 불편 증가	➢ 보이스피싱 상담·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 ➢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홈페이지를 현행 금감원 "보이스피싱지킴이" 홈페이지로 임시 UI 통합 (신고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로 전송됨) ➢ 국민은 1회만 신고하므로 편의성은 증가하나, 통합된 시스템(플랫폼)이 아니어서 정보 분석·공유에 다소 한계	➢ 1단계 홈페이지 신고 불편(여러 번 신고) 해소를 위해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구축 → 피해내용 1회 입력하면 피해 상황에 맞게 각 대응 기관으로 자동으로 조치 요청 ➢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·신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·통합하여 분석 ➢ AI기반 분석결과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정지, SNS 계정차단, 피해금 환급, 악성앱 유포지 차단, 미끼문자 필터링 강화 등 신속 대응